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ervice Support Program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여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정지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조성은

Dept. of Social Welfare, Yeo Joo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 Jeong, Jee Young

Headquarters for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Project Planning Manager : Cho, Seung Eun

〈목 차〉

- | | |
|--|--------------------------------------|
| I.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IV. 지역사회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실태 |
| II. 지역의 일-가정 균형 모델의 발달과정 | V.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제언 |
| III.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의 종류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rvice support programs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Service support programs in the community are at beginning stages of development, because it has taken about 10 years to put a self-governing system into practice in Korea. This study concentrates on service support programs developed by various service organizations in the city and does not include any rural districts. First,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work-family balance model and type of the service support program in the community were studied. Next, the situation of care service support was examined based on written articles. Finally, a few suggestions were made

* 주저자, 교신저자 : 정지영 (jjrosa@hanmail.net)

for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The developmental situation of work-family balance in Korea is in a stage which is shifting from the company-leading model to a family-company-community model. The most common type of service support program offered in the community until now has been the informal sector through relatives, neighbors or friends. However, service support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by the government and in the voluntary sector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has rapidly been growing and the number of services from each sector has also increased. Profit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medical and care service centers, are also now rapidly increasing. It appears that service support programs contributing to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come from a number of sectors, including public, voluntary, private and informal sectors, to suit consumer needs.

Key Words : 일-가족 균형(work-family balance), 서비스지원프로그램(service support program), 지방자치제도(the self-governing system), 민간영리부문(private sector), 공공부문(public sector),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민간비영리부문(voluntary sector), 비영리조직과 법인(nonprofit organization and corporation).

I.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일-가정 균형’이란 표현은 일-가정 양립, 혹은 직장-가정 양립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인다. 이 두 영역은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접근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한 두 개의 정책이나 단순한 지원책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일-가정 균형의 문제를 일하는 기혼여성들만을 위한 여성정책의 일부분으로 단순화시키려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남성들의 변화 없이는 우리사회에서 이제 일반화된 가족형태인 맞벌이 핵가족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장지연, 2005).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지금까지 가족 내 여성들에게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던 양육과 부양의 책임이 더 이상 개별 가족에게만 방치될 수 없는 상황임(장혜경, 2006)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에 대한 단일한 사회적 대처의 여파로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그리고 가족 내에서는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돌봄 노동’의 책임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져야할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는 남성들의 적극적인 돌봄 노동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돌봄 노동이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균형에 있어 일의 중단이나 포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 이것이 우리나라 대다수 가정의 형태인 맞벌이 가정의 가계소득 및 생활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일-가정 균형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은 현재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부분으로써 전반적인 국가의 ‘일-가정 균형’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비영리부문에서 지원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사실 국가의 일-가정 정책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

지정책들이 1996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수립되면서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약 10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복지행정의 자발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일-가정 균형'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성은 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현재 국가정책 차원에서 해당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균형'정책을 가장 요구하는 대상인, '맞벌이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의 관련 복지기관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며, 대다수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역사회가 지역 내에 자체조직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세부 시행 지침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요보호 대상, 즉 한부모, 저소득가정이 아닌 맞벌이 일반 가정을 위한 일-가정균형은 지원체계가 미미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가정 균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노력들, 즉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일반가정,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방향을 찾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일-가정 균형 모델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가정 균형 모델의 서비스 지원 체계의 종류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가정 균형 모델의 서비스 지원 체계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아닌, 정책

적 지원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정책적 보충 부분을 찾는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영리부문(영리 기업체)의 발달이 미약하고 서비스 수요에 비해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의 수도 부족한 농어촌지역보다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존재하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시가정의 가족돌봄 체계를 보다 균형있게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지역사회의 일-가정 균형 모델의 발달과정

지역사회에서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90년 이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가족친화적 노력들이 맞벌이를 하는 개인과 이들의 고용주(특히 기업)를 중심으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배경에는 우선적으로는 기혼 여성의 취업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반수를 넘게 되면서 우수한 노동력의 확보 경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일하는 부모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맞벌이 핵가족에 대한 확대가족과 친족의 비공식적 부문의 지원을 통해 일-가정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노동력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자 기업에서 높은 생산성과 이윤향상 및 안정적인 우수한 노동력 확보차원에서 일-가정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전략들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즉 여성 취업의 일반화로 가정일로 인해 직장일이 방해를 받거나 직장일로 인해 가정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

업들이 스스로 시도한 것이다(김미경 외, 2004).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가정 균형을 강조하는 가족친화적 기업들이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되었다. 따라서 기업에서 직장가정 간의 분리를 강조하고 직장에 보다 전념하기를 바라던 시각에서 점차 일과 가정 간의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각이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정규직에서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고 인력난도 심하지 않아 일과 가정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가족친화적 기업이 많지 않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일-가족 간의 통합 수준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거나 근무조건을 다양화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사원복지를 위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모가 큰 기업에서 직장 내 보육기관을 두어 직원복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역시 남성과 여성, 아동과 노인 등 가족 모두를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여성의 고용촉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소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친화적인 정책들은 맞벌이 가정이 일상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일-가정 문제를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측면에서 배려한 것이 아니라 가족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생산성 저하나 결근 및 이직 등의 기업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정책측면에서 모색된 방법들이다(정영금,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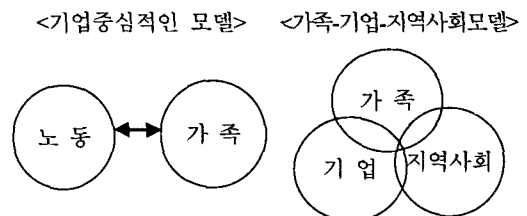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시장환경이나 기업환경이 변화하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생활 모두를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고, 기업만이 가족의 이중노동의 부담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국가와 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사회제도가 정부지원 없이 기업중심적인 모델만으로는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고 가족중심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낮추는데 책임을 지는 주체를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의 일-가정 균형의 가족문제를 가족과 기업이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는 기업중심적인 모델에서 가족-기업-지역사회 모델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 모델은 일과 가정생활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작업장(기업),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세 주체가 단순히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델은 가정의 문제를 가정과 시장 간에 자유로운 거래관계에 의해 해결하고 국가는 가정의 문제에 최소한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제시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일과 가족센터는 위원들의 모임을 통해 일과

〈그림 1〉 일-가족 균형에 관한 기업중심적인 모델과 가족-기업-지역사회모델



출처: Googins, Shared responsibility for managing work and family relationship: a community perspectives, ed. by S. Parasuraman & J. H. Greenhaus, 「Work and Family」, 1997.(정영금, 2003, p.260 재인용)

가족생활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 가족, 학교, 시민, 기술 등의 다섯 분야에서 해당 자들이나 관련자 혹은 기업들이 실행해야 하는 특별한 행동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일과 가족생활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족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주변 환경들이 통합적으로 상호 지지 및 지원을 해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Bankert와 Lobel, 1977; 정영금, 2003 재인용 p.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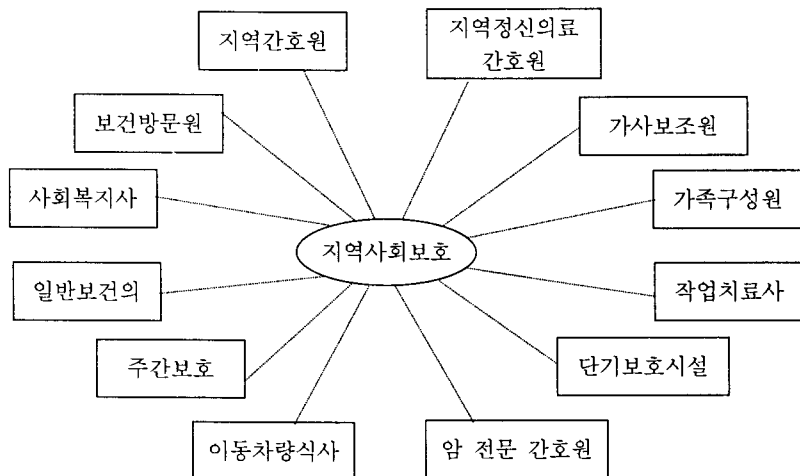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일-가정균형을 위한 서비스지원프로그램은 현재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인 개념인 지역사회복지(communitry welfare)측면에서는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란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족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일-가정균형을 위한 서비스지원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복지 중에서도 지역사회보호(communitry care)에 해당된다. 지역사회보호는 지역사회와 보호 개념의 합성어로 일과 가정 균형이 이루

어지는데 있어서 가장 당면 과제인 가족부양과 보호의 역할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로서, 지역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한 독립과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개입과 자원을 제공한다. 특히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의 형태로서 제공되어 진다(오정수·류진석, 2004).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의 가족들이 일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이나 노인 부양 및 환자 간호 등 시간적 압박으로 인하여 가족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힘든 분야에서 가정과 유사한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형태이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호 현장(setting)에서 광범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이 이루어진다.

즉 보호 현장에 따라, ①가정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재가(在家)의 지지, ②보다 많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주간보호(daycare)

〈그림 2〉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범위



출처: 오정수·류진석(2004), 지역사회복지, p.166 지역사회보호 범위 재인용.

와 요양, ③주거보호시설(sheltered housing)이나 그룹 홈(group homes), ④주거보호(residential care)나 요양원보호, 장기적 병원보호 등이 있다. 또한 보호 주체에 따라서는 ①가족, 친구, 이웃 등 보호 수발자(carer)에 의한 서비스, ② 사회적 보호, ③건강보호, ④사회보장 등으로 분류된다(오정수·류진석, 2004).

III.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의 종류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의 주체를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민간영리부문, 비공식 부문 등 크게 네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공공부문(public sector)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역사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개입은 산업화를 전후한 사회변동의 상황에서 가족이나 종교기관에 의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책임을 지게 되고 빈곤계층,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의존인구에 대한 지역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입하게 된다(오정수·류진석, 2004). 우리나라의 현행 일-가정균형에 대한 지역공공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여성가족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해당 부서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공급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서비스, 노인과 장애인

및 요보호가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기혼여성의 노동 및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부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획과 조사 및 시행 등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서비스가 해당된다.

2. 민간비영리부문(voluntary sector)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이 형태는 민간이 운영하므로 공공부문과 차별화되고 또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민간부문과 차별화된다. 비영리부문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 민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일정 부문의 지원과 법인의 자체부담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일부 개인부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민간비영리부문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민간비영리부문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복지국가 위기론의 등장 이후 이들 비영리 부문의 활성화와 함께 공공부문의 민간비영리부문에 의한 대체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는 민간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들이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균형을 돕는 아동, 노인,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보호, 주간보호, 사회적 서비스, 재가복지, 도우미파견사업 등이 해당된다.

3. 민간영리부문(private sector)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이 부문은 최근에 출현되어 확대되고 있는 민간의 사적 영리부문으로서 일반 시장 메커

니즘을 통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공급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은 미약하지만 육아 분야나 간병 분야 등의 일부에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기업체가 출자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통하여 노인 등 복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산업의 출현이 바로 그러한 것이며, 소득 수준이 높은 고령사회에서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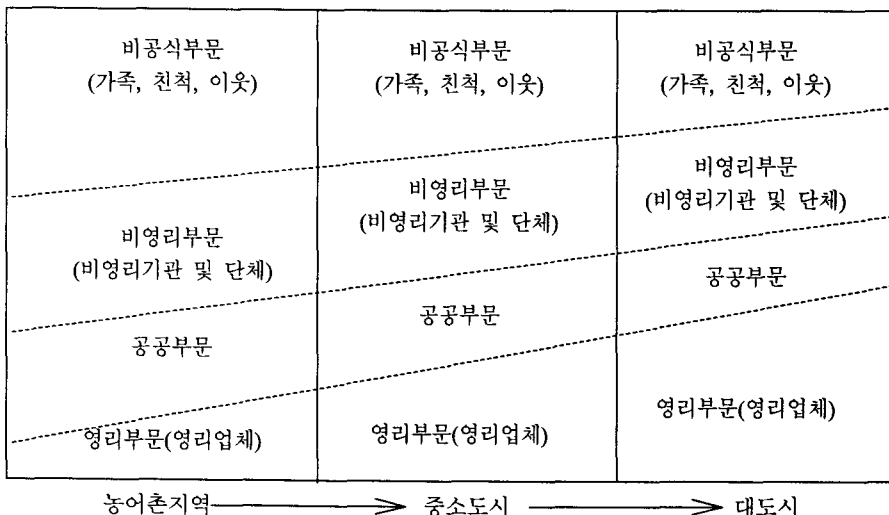
4.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이 부문은 민간, 특히 가족, 친척, 이웃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해 왔던 실천의 주체이다. 물론 일-가정균형에서도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 환자간호 등의 가족 돌보기에서는 이들 지

역사회의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이제까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화로 인해 이러한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취약해 지면서 공식적인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일-가정 균형 서비스들이 활성화된 것은 사회변동에 따른 시대적 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지원주체에 따른 이용 상황이나 수요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영리부문의 간병업체와 요양시설 및 베이비시터 파견 민간업체 등이 발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반면, 공공부문이나 비영리부문의 시설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도시저소득층이나 요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의 우선권으로 인하여 서비스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할 실정이다. 또한 돌봄 노동의 기피현상과 핵가족화와 거주거리가 광역화되면서 도시지역의 비공식부문의 지원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림 3> 지역규모에 따른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주체부문별 이용도



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아동양육이나 간병·간호업체인 민간영리부분의 미발달과 공공기관의 도심 소재, 비영리 복지기관의 부족 등으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부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상황이다.

IV. 지역사회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실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은 초기에는 주로 보육정책과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먼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는 양성평등적인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에서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와 함께 휴가·휴직정책의 보편화와 활용을 제고 및 양육뿐 아니라 간병과 간호 역시 정책적 지원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였다(최은영, 2007).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에서 제공되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실태를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와 간병지원 서비스, 가족돌봄지원 서비스로 나누어 공공부문, 민간비영리부분, 민간영리부분, 비공식부분 등의 4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1) 공공부문에서의 양육지원 서비스

공공부문에서의 양육지원은 정책적으로 영아보육 활성화, 취업부도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책, 일-가정 양립 사회 시스템 구축,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을 목표로 국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여성가족부, 농림부, 노동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가장 다양한 정책적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이들 양육지원 서비스는 영유아 보육법,

〈표 1〉보육료의 직접·간접 지원 근거와 정책

주무부처	법적근거	정책 및 사업	내용
여성 가족부	영유아 보육법	보육료기본보조금제도	- 기본보육료 지원을 민간보육시설로 확대
		영아보육 활성화	- 영아전담시설 지원을 위한 영아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노동부, 여성 가족부	남여평등 고용법, 영유아 보육법	직장 보육시설 지원	- 사업장 보육시설비 무상지원 및 용자 - 운영비 지원(교사 1인당 월 80만원) - 세제감면 혜택
		보육수당지급제도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경우 정부 보육료 단가의 1/2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으로 지급
여성 가족부	건강가정 기본법	아이돌보미 사업	-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경우, 0~만 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 이용료 지원
농림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여성농업인 육성법	출산농가도우미 지원	- 3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원(35천원/ 1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보육시설 이용 시 연령별(0~4세)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급(5세: 100%지급)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시라도 보육료 지원단가의 25% 지급

출처: 노성향 외(2007) p.46에서 인용

남녀평등 고용법, 건강가정기본법,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여성농업인 육성법등을 근거를 두고 있으며, 크게 보육료 지원과 직접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양육지원 중 공공부문에서의 보육료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직접적 지원이 되는 경우와 간접적 지원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직접적 지원은 여성가족부와 농림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 중 여성가족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민간보육시설을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 2007년 실시된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은 시간당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5,000원 중 1,000원을 부담케 함으로써, 국가가 4,000원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보육수당지급제도에 의해 보육료의 1/2금액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간접적 지원은 주로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에 의해 시행되는 영아반 운영비 지원, 영아반 인건비 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농어촌 보육 서비스 확대방안으로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농가도우미 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등이 있다(농림부 사업지침, 2007). 이러한 사업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계획하여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현행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아이를 출산한 농가에 3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30일간 출산농가도우미 이용료(35,000원/1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어업인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0-4세아는 연령별 보육료 단가

의 50%를 지급하고 5세아는 100%지원하고 있다.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의 자녀도 취학유예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만 5세에 준하여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 있다. 전체 농어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육아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 농어업인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연령별 보육료 단가의 25%를 지원하는 제도도 200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양육지원 중 직접적인 보육 서비스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들 수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양육자의 질병, 야근, 출장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탄력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여성가족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06년 천안, 울산,

〈표 2〉 보육서비스의 지원 근거와 정책

주무부처	법적 근거	정책 및 사업	내용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아이돌보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만12세 아동 대상 -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와 돌보미 희망가정 연계 -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료: 시간당 5,000원

여수, 부산 4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요구 파악 등 사업 준비를 통해 '07년부터는 38개 지역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자녀양육 관련 양성 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 민간 비영리 부문에서의 양육지원 서비스

민간 비영리 부문의 양육지원 서비스 형태로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아가야 사업 (SK와 연계한 기업 연계형 일자리)과 한국여성노동자회 저소득가정의 보육도우미 파견 (공동모금회)을 들 수 있다.

우선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 저소득층 보

육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전국 6개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되어 저소득 135가구에 무료 가정보육사를 파견하고 있다. 사업관리는 중앙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외에 6개 지부가 수행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아보육서비스와 야간보육서비스의 두 가지 형태로 전자는 영아를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보육하는 것이고, 후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을 방과 후에 부모 귀가시간에 맞추어 보육하는 서비스이다. 이들 보육도우미의 기본 활동은 아이 돌봄, 건강 돌봄, 정서 돌봄,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도우미는 매일 가정보육 일지를 작성하고, 아동발달을 위한 놀이지도 및 학습지도를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민간 비영리 부문에서의 양육지원 서비스

구분	보육도우미파견 사업	아가야 사업
사업지역	한국여성노동자회외 6개 지부	16개 지역 (YMCA)
서비스 내용	- 영아보육사파견: 8시~19시 - 야간보육사파견: 4시 이후(6시간)	보호 및 돌봄 중심 시간제 서비스
주 이용자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장애아가구 우선	저소득층
이용요금	무료	기본 2시간 11,000원, 기본 3시간 16,000원, 추가 시간당 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차상위 : 요금의 30% 부담 일반인 : 요금의 100% 부담
사회보장	영아보육도우미:4대 보험 야간보육도우미:4대 보험 선택가능 기관배상보험	4대 보험 및 상해보험
자격기준	실직여성	저소득층 여성 대상 센터 당 10명 배치, 총 160명
교육	신입교육: 80시간 교육, 24시간(1박2일) MBTI교육, 현장실습40시간 : 총 144시간	80시간
돌보미 수당	영아보육도우미: 시간당 3,500원 야간보육도우미: 시간당 5,300원	고정급 : 기본급 70만원+각종 수당/보험료

두 번째 민간 비영리부문에서의 양육지원서비스는 ‘아가야’ 사업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영·유아를 돌봐주는 맞춤형 보육시설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SK와 연계한 기업 연계형 일자리)을 한국YMCA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다. 아가야 사업은 서울을 비롯해 용인, 시흥, 광명, 화성, 대전, 청주, 아산, 홍성, 익산, 광주, 전주, 창원, 진주, 김해, 춘천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간제로 부모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쇼핑이나 운동, 파트타임, 근로 등 잠깐 불일을 보러 가는 부모들에게 어린이 보육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층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이 적용되며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봉사한다.

그 외의 민간 비영리부문에서의 양육지원서비스는 아동양육 부모들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조합을 이루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을 들 수 있다. 마포지역에서 1994년 우리어린이집과 1995년 나르는 어린이집이 각기

설립되었는데, 공동육아연구원(현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부모와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현재의 보육문제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참여형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구상하여 설립한 것이다. 이후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우리어린이집은 1996년 방과후교실을 마련하였고, 1999년 도토리방과후어린이집으로 독립하였으며, 나르는 어린이집은 2000년 풀잎새방과후교실이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독립한 것이다. 현재 마포지역 공동육아는 3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방과후어린이집이 있으며, 조합원의 대부분은 어린이집 주변에 모여 관계자들과 출신 가족들 2000여 가구가 마을주민으로서 살아간다. 이 조합은 또한 온라인상에서 공동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한겨레 21, 2002년 1월 30일).

3) 민간 영리 부문에서의 양육지원 서비스

사적 영리 부문에서의 양육지원 서비스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이 변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는

(표 4) 민간 영리 부문에서의 양육지원 서비스

구분	영리베이비시터
사업지역	'05.5월 기준 전국 83개 업체 운영
서비스 내용	놀이 및 학습, 가사 활동, 시간제, 종일제 (출퇴근, 입주)
주 이용자	중산층 이상
이용요금	가입비 8만원 내외 시간당 6,000-7,000원 - 종일제의 경우 한달 100-150만원 정도
사회보장	기관별 보험 가입 여부 및 종류 차이
자격기준	없음
교육	초단기 기관별 차이
돌보미 수당	100-150만원(종일제)

실정을 감안, 수익을 예견하고 생겨난 민간차원에서의 서비스이다. 베이비시터 사업은 인력 파견업에 들어가는데, 신원이 확실한 베이비시터를 모집하여 교육을 시키고 각 가정에 파견하는 일이 주요 업무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시터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주로 부모나 친척 등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 돌보기가 행해졌지만 IMF를 기점으로 전문적인 사업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사보육 현장인 베이비시터 사업도 사양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정민자 외, 2006). 이는 부모가 베이비시터의 자격, 이용료, 양육에 대한 기대 등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이다(장혜경, 2006). 현재 베이비시터는 서울, 경기권에서 일정부분 생존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간병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을 함께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겨우 생존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시터 사업은 양육지원 서비스체로서 민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4) 비공식 부문에서의 양육지원 서비스

비공식 부문에서의 양육 지원서비스는 부모나 친인척이나 혈연, 이웃 등에게 자녀양육을 의존하는 형태이다. 공식부분에서 정부가 영아보육 전담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전국보육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취원율은 8.9%로서 매우 저조하다. 이는 영아보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욕구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민자 외, 2006), 공식보육 서비스의 가격과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영아보육 시설보다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 것이다 (장혜경, 2006). 2005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취업여성의 경우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70%, 보육시설 이용이 15.3%, 가사대리인이 9.4%로

서 친인척이나 혈연에 의한 양육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웃 몇 명이 모여 아이를 돌아가며 돌보는 품앗이 형태의 공동육아가 비공식 부문에서 새로이 나타난 양육서비스지원 형태이다. 품앗이 공동육아란 엄마들이 교사이면서 운영자가 되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으로, 1996년 은평구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처음 시도되었다. 당시 은평구에 거주하며 유치원에 보내던 엄마들이 영어교육, 글자교육 등 조기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마음이 맞는 엄마들이 직접 원하는 방식대로 유치원을 꾸렸는데, 이것이 첫 품앗이 공동육아인 ‘엄마사랑유치원’이다. 이후 ‘책마을 유치원’, ‘함께 크는 우리 놀이방’ 등 품앗이 공동육아 모임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품앗이 공동육아는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지만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살아감을 전제로 하며, 아이의 특성, 성별, 지역, 계층 등 모든 사회, 문화,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자랄 수 있는 공동체적 육아방식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려는 부모들이 찾을 수 있는 대안이 품앗이 육아이다. 몇 가구가 힘을 합쳐 각자 집에서 돌아가며 공부방을 열고 엄마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앞에서의 민간비영리 공동육아에서 요구되는 터전비용 같은 출자금이나 교사채용이 필요가 없어 월 회비가 2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품앗이공동체 사이트(pumasi.woorizip.com)에서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다(한겨레 21, 2002년 1월 30일).

2. 간병지원 서비스

맞벌이 가족의 일-가족 균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간접적인 서비스는 주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이다. 이러한

(표 5) 간병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지원 부문

지원방식 서비스종류	공적부문 지원	민간부문 지원		비공식부문 지원
		비영리부문 (공적+사적)	영리부문 (사업·기업체)	
산후조리	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방문보건서비스	산후조리원	가족, 친족, 이웃
병간호	보건소 국립·시립요양시설이나 센터, 병원 등	간병도우미 파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기보호센터 정신보건센터	가정간호사 병원 간병인	가족, 친족, 이웃

간병지원 서비스는 우선 자녀출산 후의 맞벌이 주부의 산후조리, 가족 중 환자의 병간호와 건강악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 및 장애인의 수발 등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다.

1) 산후조리서비스

산후조리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주로 가족, 친족,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 부문에서의 지원이 가장 많은 편이다.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영리부문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주로 친정이나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건강이 쇠약하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산후조리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산부인과병원 근처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들이 있고, 산후조리원의 시설이 다양화, 고급화 되면서 영리적인 산후조리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 달 평균 이용료(주당 평균 20만원~40만원선, 추가적인 옵션에 의해 다양한 가격을 형성함)가 높은 편이어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비영리 부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산후조리 서비스의 수요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2006년부터

사회적 서비스의 일환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소수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어 일반화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의료시설이나 산후조리원의 미발달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고 주로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산후조리가 가장 많은 편이다.

2) 간병서비스

간병서비스의 경우도 산후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주로 가족, 친족에 의한 비공식 부문에서의 지원이 가장 많은 편이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일이므로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간병을 하면서도 심지어 힘들거나 시간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에는 간병서비스를 부분적으로 함께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장기 입원 환자의 맞벌이 가족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과 함께 직장생활에도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이때 대부분 소규모 간병인 업체의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일 평균 이용료가 5만원 내외로 높은 편이어서 한 달 내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시간대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지원이나 민간 비영리 부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나, 공공부문의 지원은 국립·시립 시설이나 센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무의탁연고자나 최저생계비보호 대상자 등 요보호 대상자에게 입소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 또한 민간비영리 부문의 재가복지센터의 간병도우미서비스 역시 요보호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따르고 있어 많은 경우 간병 서비스는 비공식부문의 가족과 친족에 의해 절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가족 돌봄 지원

가족 돌봄 지원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크게 노인부양지원서비스와 장애가족지원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노인부양 지원서비스

노인 부양지원서비스는 주로 맞벌이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용방식에 따라 재가서비스로는 독거노인돌보미와 가사도우미서비스가 있고, 주간보호서비스에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의 이용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이 있고, 요양시설에는 무료 또는 실비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이 해당된다. 이외에 사회적 서비스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있다.

이러한 노인부양지원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는 보건소와 국공립 노인전문병원, 국공립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등이 있다.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와 간병, 보호와 교육 및 재활과 치료 등이고, 프로그램은 건강과 치료, 다양한 취미활동과 교양교육에서부터 상담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민간비영리부문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으로부터

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다양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법인 및 주민자치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재가복지사업과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요양·양로시설, 그룹 홈 등 다양한 스타일의 지원서비스가 존재한다.

영리부문에서의 노인부양 지원서비스는 최근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리부문에서 서비스제공의 주체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영리부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가족과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가족이나 친족,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좌우하게 된다.

2) 장애 가족 지원 서비스

장애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주로 맞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해당된다. 이용방식에 따라 재가서비스로는 가정봉사원파견, 가사도우미서비스 등이 있고, 주간보호서비스에는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으며, 요양시설에는 무료 또는 실비의 장애인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장애가족지원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는 보건소와 국공립 장애인시설 등이 있고, 사회적 서비스로서 장애인 바우처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2006년 5월에 시작되어 아직 체계화되어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와 간병, 보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민간비영리부문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다양한 민간부문의 장애인복지법인 및 장애인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재가복지센터와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그룹 홈, 장애인재활센터, 정신보건

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의 주간보호시설과 생활 시설을 통해서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특화된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은 교육 및 재활과 치료, 자활 등의 분야에서 건강과 치료, 다양한 자립활동과 취미활동, 교양교육에서부터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같은 민간비영리부문에서의 서비스지원이 장애가족지원 서비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공되는 분야이다.

영리부문에서의 장애가족 지원서비스는 그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고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지원주체가 발달되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을 위해서 영리업체의 간병도우미, 가정봉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영리부문의 지원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지만, 주로 돌봄 서비스 보다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관련 특수교육과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장애 돌봄 업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이용도 비영리부문의 서비스지원의 이용이 불가능할 못할 때 가족과 가계에 큰 경

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족,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앞서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외에 간병지원 서비스와 가족돌봄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의 공적부문에서의 서비스지원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각 정부기관별 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돌봄 종합서비스의 형태로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실천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의 중복과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일-가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통합적인 시스템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가족-기업-학교-지역단체 등이 연계하여 일-가정 균형을 위한 위원회와 연구소를 운영하고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표 6〉 가족 돌봄 서비스지원의 종류와 서비스지원 부문

지원방식 서비스종류	공적부문 지원	비영리부문 (공적+사적)	영리부문 (시장, 기업체)	비공식부문 지원
노인수발	보건소 노인전문병원 국공립 노인양로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미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단기보호센터	실버산업 유료노인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병원	가족, 친족, 이웃
장애인 수발	보건소 국공립 장애인 시설 및 센터 장애인 활동보조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유료장애인요양 시설	가족, 친족, 이웃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직 미 실시 사업이며, 2008년부터 실시 계획임.

〈표 7〉 공공부문과 민간 비영리부문(사업위탁)의 돌봄 서비스 사업 실시 현황

종류	부처	사업명	서비스 종류	인원 (계획)	근로조건	월 임금 (소득)	사업 방식	기타
간병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산후조리	1,418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적용. 규정 없음.	76만원	바우처	시장보다 낮은 서비스료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요양, 환자간병, 장애인활동보조, 기타	10,833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적용	65만원	사업위탁 (예산지원)	- 서비스 이용자 제한 : 수급자, 차상위 - 다른 사업과 중복
	국가보훈처	가사간병서비스지원(보훈도우미)	가사, 간병	400		65만원		- 다른 사업과 중복
가족돌봄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미	노인요양	4,683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적용/ 실제 적용 50%이하	56만원	바우처	- 이용시간 부족 - 사회적 약자에게 자부담 부과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노인요양	7,200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적용	60만원	사업위탁 (예산지원)	- 사업 효과성 부족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	34,000	고용의무 없음	?	사회보험	2008년 실시계획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활동보조	11,000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적용/ 실제 적용 50%이하	50만원	바우처	- 장애 1등급만 지원 - 사회적 약자에게 자부담 부과 - 이용시간 부족
돌봄종합서비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	돌봄 종합	3,000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적용 제외	65만원	사업위탁 (예산지원)	- 이용자 제한: 수급자 및 차상위 - 다른 사업과 중복
		지역복지서비스혁신	돌봄 등	17,400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적용 규정 없음	60만원	바우처	- 서비스 질 관리 체계 허술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돌봄 종합	3,500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적용	77만원	사업위탁 (예산지원)	- 사업비 비지원, 수행기관에 퇴직금 부담 전가 - 다른 사업과 중복

* 출처: 한국여성노동자회(2006), 돌봄서비스정책, 좋은 일자리 공공성 강화로 갈 것인가? 이완정(2007), '아이돌봄미 지원사업'현황 보고 및 평가 토론회;에서 재인용.

있어서 가족자원경영학자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V.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제언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접근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비공식부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방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적 돌봄 지원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화

민간차원에서의 일-가정 균형은 영리적인 목적이 우선이므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동의 수가 줄어들어 인하여 민간 영리서비스 지원은 활성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돌봄 서비스가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거나 민간 비영리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공적 서비스와 민간비영리 부문 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지속되어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공적 돌봄 서비스를 기피하는 이유가 비용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공적 재원의 투입한 서비스 가격의 저렴화와 이러한 서비스의 한 형태인 바우처사업의 확대 및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 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현재 공적 부문에서의 복지재정의 증가가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일-가정 균형정책의 서비스나 재정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생겨나 잘 운영되고 있는 품앗이 육아, 공동 육아 및 가족 친화 마을 등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지원과 활성화정책이 일-가정 균형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마련해 가정에서 맡고 있는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하는 ‘가족친화형’ 마을의 조성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미 여성가족부는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보육시설 설치, 가족프로그램 운영비 등과 관련된 정책예산에서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시범지역에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마을당 20억 원씩 모두 6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국정브리핑 2007. 2. 18). 즉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연령별, 유형별 수요에 맞추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설들이 제공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바뀌어 가는 가족구성원들의 요구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에서 맡고 있는 노인부양, 아동양육 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는 가족친화 마을의 형태와 가족발달단계에 따라 마을 안에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올해 시범 지정되는 가족친화 마을들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기여도가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형 마을로 강원 영월군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마을’, 전남 장흥군 ‘인간·자연 공존 우산 Slow World’, 충남 논산시 ‘햇빛촌 바람산 마을’을 선정한 상태이며, 이곳에 2009년까지 20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성미산 마을처럼 자생적으로 이뤄진 가족친화형 마을이 앞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3. 일-가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가사 및 양육관련 서비스의 제공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사 및 자녀양육, 가족 돌봄 관련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주체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홈페이지인 패밀리넷을 통해 현재 시범적으로 양육관련 상담 및 부모교육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시작단계로 홍보와 콘텐츠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63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0년까지 전국 234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많은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지원을 기대해볼만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가족 균형을 위한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범적인 사례가 현재 서울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벌이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실이 보충학습과 특기적성 위주의 교육이며, 2~3시에 끝나서 그 이후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는 1~3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과후 교실은 센터 내에서 직접 아동을 돌보고 학습지도와 다양한 정서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학습과 정서 부분의 욕구를 동시에 채워주고,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실시하여 아동의 정서 불안증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보육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는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그 호응이 높으며, 일하는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모가 퇴근하고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저녁식사 제공과 함께 저녁 9시까지 운영함으로써 다른 방과후교실과는 운영방식도 차별화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교사가 따로 있어 학원 연계, 병원 통원치료, 예절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지원형태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 2)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gg.go.kr>).
- 3) 국정브리핑 2007. 2. 18. 서울 성미산 마을 동네 아이들 함께 키워요.
- 4) 기독교 복지신문 2006. 11. 2일자.
- 5) 김미경 외(2004). 일과 가족사이. 조은 글터 출판사.
- 6)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7)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
- 8) 노성향 외(2007). ‘경기도 취업여성의 영아보육 지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9)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 10) 농림부(2007). 2007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지침.

- 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12) 보육정보센터(<http://educare.gyeonggi.go.kr>).
- 13) 성미산(www.sungmisan.net).
- 1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15)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침.
- 16) 오정수, 류진석(2004).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 학지사.
- 17) 월간<B&F>(www.changupportal.co.kr).
- 18) 이경란(2004). 성미산-공동육아에서 마을 공동체의 모색으로 : 그 경험과 열린 가능성. 2004 대구 여성환경포럼.
- 19) 이완정(20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운영성과와 과제.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20) 장지연(2005). '일-가정 양립에 관한 몇 가지 오해'. 레이버투데이. 2005.9.20.
- 21) 장혜경(2006). '아동과 노인은 누가 돌보나?'. 보건복지포럼, 35-43.
- 22) 정민자 외(2006).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23) 정영금(2003). 여성의 일과 삶. 서울 : 시그마프레스.
- 24) 조희금 외 8인 공저(2007). 가정생활복지론. 서울 : 도서출판 신정.
- 25) 최은영(2007). 가족정책의 방향-일-가족 양립과 일-생활 균형의 추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 111-134.
- 26) 한겨레21. 2002년01월30일 제395호. 공동육아에 참여하려면.
- 27) 이완정(20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황 보고 및 평가 토론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접수 일 : 2008년 01월 15일
- 심사 일 : 2008년 01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2월 20일